

김관진 “北 추가 도발시 항공기로 폭격할 것”

〈국방장관 내정자〉

“적 위협 소멸때까지 모든 전투력 투입 응징”

국회 청문회 답변 … “교전 규칙·자위권 구분”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는 3일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분명히 항공기를 통해 폭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한 뒤 교전 규칙 개정 문제에 대해 “교전 규칙과 자위권 행사를 구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교전 규칙은 우발충돌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으로 유효하지만 먼저 도발을 당한다면 이것은 자위권 차원으로, 적의 위협 근

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할 수 있다”며 “가용한 모든 전투력을 투입하고 부족하다면 합동지원전력까지 투입, 추가적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쳐가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또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는 6·25 전쟁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적이 또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공격할 경우에는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형태를 어떻게 보느냐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문에는 “북한은 (그동안) 예측이 어려운 방향으로 도발을 해왔고, 간수록 강도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양상으로도 발해를 가능성이 있다. 여러 유형에 대한 완벽한 대응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노무현 정권 당시 미국과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에 합의한 것과 관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으로 늦춘 데 대해 “국가안보 상황에 비춰 2012년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맞지 않은 데다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군 자체 능력이 커져야 하는데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주적 개념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내정자는 “북한 지도부와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임에 분명하다”면서 “이를 국방백서에 넣을지를 재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행정관료화된 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데 대해서는 “야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를 육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내정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특히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 방어 태세와 주가도발시 대응방안, 국방개혁,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복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고용창출 대상

평동산단(주)프리미어

평동산단내 상업용 냉장고 제조업체인 ㈜프리미어가 ‘제1회 광주시 고용창출 대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지오메디칼, 현대하이텍, 호원 등 3개 업체가 공동 수상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3일 광주 서구 염주동 합체육관에서 ‘제1회 광주시 고용창출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식상에서는 지난해 7월 인천에서 광주 평동공단으로 옮겨온 ㈜프리미어가 대상을 수상했다. 프리미어는 상업용 냉장고를 제조해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정규직 102명을 추가로 고용해 실업난 해소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기아차 1차 협력업체인 현대하이텍은 자동차용 전장 전문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4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정년을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컬러 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인 지오메디칼과 자동차용 차체 부품 제조 전문업체인 호원은 정규직 59명과 48명씩 추가로 고용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주시와 광주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 종소기법원이 원활한 이번 행사를 고용안정에 이바지한 지역 기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으며, 공모를 통해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와 공직자 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상업체를 선정했다.

/박정기자 jwspark@kwangju.co.kr

해남부군수에 이재철씨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공석이 된 해남부군수에 이재철 전 전남도 감사관(54)이 임명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박준영 전남지사는 3일 신임 이 해남부군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곡성출신인 이 부군수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에서 전남도로 전입, 도 감사관으로 근무해 오다 지난 2월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 교육과정 중이었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양 도착 美 군수물자

미군 수송선인 워슨(Watson)호가 3일 광양항에 입항해 하역훈련을 하고 있다. 워슨호는 축구경기장 5개 규모로 다양한 장비를 적재. 미군이 주둔한 곳에 물자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날은 전투장비가 아닌 트럭 등 지원장비를 하역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삼성 3세 경영체제 닷 올랐다

이재용·이부진씨 사장 승진 …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 발족

삼성그룹은 3일 이재용(42)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부진(40) 호텔신라·에버랜드 전무를 각각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부회장 승진 2명, 사장 승진 9명, 전보 7명 규모의 사장 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전 회장의 장남과 장녀가 사장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립에 따라 삼성그룹은 3세 경영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게 됐다.

부활한 그룹 통합 조직은 ‘미래전략실’로 명명돼 본격적인 조직과 진용을 갖췄다.

이번 인사에서 삼성전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이재용 부사장은 삼성전자 COO 사장으로, 이부진 전무는 에버랜드 전략담당 사장 겸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이부진 사장은 아울러 삼성물산 상사 부문의 고문을 겸임한다.

또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하고,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강호운 대표이사 사장은 중국 본사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자리를 옮긴다.

삼성전자에서 AT&T 출신인 우남상 부사장이 시스템LSI 담당 사장으로, 전동수 부사장은 메모리반도체 담당 사장으로 내정됐다.

또 김재권 부사장은 삼성LED 대표이사 사장, 김종중 업무지원실 부사장은 삼성정밀화학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됐고, IBM 출신인 고순동 삼성SDS 부사장과 순석원 삼성 토탈 부사장, 김신 삼성물산 상사부문 부사장은 각각 소속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발령 났다.

조수인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메모리 담당 사장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사장으로, 박상진 디지털미디어 사업부장은 삼성SDI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최치훈 삼성SDI 사장은 삼성카드 대표이사 사장, 중국본사 박근희 사장은 삼성생명 보험부문 사장, 삼성물산 지상화 상사부문 대표이사 사장은 그룹 스포츠 업무 총괄 사장, 삼성SDI 김인 사장은 삼성리아온스 대표이사 사장으로 자리리를 옮긴다.

삼성전자의 이윤우 부회장은 대표이사 자리에 서 물러났다.

삼성은 이번 인사를 통해 신임 사장 승진 내정자 9명 중 이재용·이부진·김재권·고순동·김신 부사장 등 5명을 부사장 1년차 미만에서 밭탁함으로써 젊은 인재들을 대거 중용하는 등 사장단을 젊고 혁신적인 진용으로 짰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내주 중 계열사별로 후속 임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의회 “유급보좌관” 재추진 당장 철회해야

시의회 ‘유급보좌관’ 재추진 당장 철회해야

광주시의회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시의회가 한달 전 여론의 질책을 받고

포기했던 유급보좌관제를 다시 도입하

겠다니 말이다. 법적인 근거도 없는 유

급보좌관을 두기 위해 ‘정의 서포터즈’

라는 편법까지 동원해 관철하겠다는 애

기인데,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

유로를 수 없다. 일각에선 의원들이 받

는 4855만 원의 세비 내에서 보좌관을 채용하

는 바이어까지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유급 보좌관제 추진을 철회

하고, 국회에서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 여부를 따르는 것이 순리다. 집행부 역시 의회의 눈치가 보이더라도 편법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자칫 의회에

서 사감된 예산 83억 원을 살리기 위해

‘정치적 협상’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한통속이 된다면 그

야말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다.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화급하고 중요한 일인가.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정도(正道)가 아닌 ‘꼼수’를 두겠다

면 시민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일각에선 의원들이 받

는 4855만 원의 세비 내에서 보좌관을 채용하

는 바이어까지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유급 보좌관제 추진을 철회

하고, 국회에서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 여부를 따르는 것이 순리다. 집행부

역시 의회의 눈치가 보이더라도 편법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자칫 의회에

서 사감된 예산 83억 원을 살리기 위해

‘정치적 협상’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한통속이 된다면 그

야말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다.

법원 “한강살리기 적법”

4대강 소송 첫 판결 … 남은 소송에 영향 주목

사업 추진 탄력 받을듯 … 환경단체 반발 예상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제기된 4가지 소송 본안 첫 판결에서 사업에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4대강 사업 추진이 일단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부장판사)는 3일 경모씨 등 6129명이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시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4대강 소송 본안의 첫 판단이라 재판부의 범위가 나머지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은 사업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 외에도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가운데 부산지법이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금강과 영산강 관련 소송을 각각 대법원 행정1부(최병준 부장판사)와 전주지법 행정부(강경우 부장판사)로 막바지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기거나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 있다는 원고주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515 〈F A X 222-8005〉 문화 흥 보국 2200-541

면 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9600〉 독자서비스국 2200-651

정 경 부 2200-612 체 텔 2200-697 〈F A X 222-9500〉 광고마케팅국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디자인부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F A X 2200-555〉 기획 사업부 02-773-9335